



## 혜화역 몰카 반대 집회, 워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 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정당한 분노가 격렬하게 표현된 것

<p>혜화역 몰카 반대 6만 명 집회 여성들의 분노는 정당하다</p> <p>6면</p>	<p>워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으로 이해해야</p> <p>7면</p>	<p>한 이집트 난민 신청자의 편지, 난민에 관한 거짓말 비판</p> <p>4, 5면</p>	<p>건설 노동자 파업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p> <p>8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모비스 파업, 기아차를 마비시키다</li> <li>• 현대차 임금 인상 투쟁</li> <li>•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반대 투쟁</li> </ul> <p>2, 3면</p>	<p>한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구조조정의 악랄함을 폭로하다</p> <p>3면</p>	<p>시간들을 낸 박유하 교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p> <p>온라인</p>
--	---	---	---	---	---	---



#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 박설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바로는 3분기 제조업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한다. 여러 해 부진한 조선업은 물론 자동차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7.3퍼센트 감소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도 2~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던 고용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300인 미만의 중소 부품사들에서 고용 규모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완성차에서도 감소폭이 커졌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발 고율 관세도 커다란 골칫거리다. 지난해 현대·기아차가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60만여 대다. 르노삼성의 경우, 국내 생산 물량이 절반가량 위탁 생산이고 미국으로 보낸다. 만약 미국 정부가 실제로 수입차·부품에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속에서 사용자들은 어떻게든 위

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이윤몹을 지키려 한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외주화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현대차 사측은 “임금 인상은 절대 없다”(윤여철 노무총괄 부회장)고 못 박았다. 그것이 올해 임금 협상의 최우선 목표라고 제시했다.

사측은 또, 노동시간을 단축(주야 8+8 교대제)하려면 노동강도를 높이고 휴일·휴게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부서에서는 임금 삭감, 외주화,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얼마 전 기아차 화성공장 도장부 노동자들은 나흘간의 현장 파업으로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차만이 아니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전반에서 임금 동결, 단체협약 개악, 구조조정과 외주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 노동 유연화, 호봉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추진하며 이런 사용자들의 공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용자들은 “회사가 어렵다”, “미래

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하며 엄청난 부를 만들어 온 노동자들은 충분히 임금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 더구나 현대차그룹은 지난 2년 새 사내유보금이 14조 원 이상 늘어, 무려 135조 8870억 원이나 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억제되는 동안 정몽구는 주식 배당금을 계속 늘려 지난해에만 887억 원(계열사 포함)을 챙겼다.

노동자들이 임금·조건 개선 요구를 자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금속노조는 제조업 생산에 타격을 가할 강력한 힘이 있다. 대중 행동, 특히 파업으로 요구를 따낼 수 있고, 이에 고무반야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등 성과를 낼 수 있다.

6월 30일 민주노총 조합원 8만 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해 광화문에 집결한 데서 보듯,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이 쌓여 있다. 금속노조의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 단호하게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



## 현대모비스 파업으로 기아차 화성 공장 생산이 중단되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원

7월 10일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임단투의 시작을 알리며, 4시간 파업을 했다. 그러자 1시간 뒤쯤 기아차 화성 공장의 생산이 4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지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현대·기아차는 2000년대 들어 주요 부품 생산을 외주화·모듈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늘렸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 등 현대차 계열사들은 완성차 공장 바로 앞에서 부품을 즉시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몽구의 아들 정의선은 글로벌스와 모비스의 지분 매입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정의선은 한국의 부자 순위 9위에 올랐다. 그러는 동안 현대모비스와 글로벌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었다.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을 계기로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섰다.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노동자들도 그 중요한 일부다.

노동자들은 올해 임금 14만 7000여 만 원 인상, 여름휴가비 20만 원, 구정과 추석 귀향비 45만 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96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10일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올해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등 부품사 8개 노조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고 한다. 현대위아 광주 공장 노동자들은 13일에 전면 파업 수준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주간조 7시간, 야간조 8시간), 현대모비스 울산 등도 사측이 성실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노동자들은 완성차 생산에 타격을 입힐 막강한 힘이 있다. 이 노동자들이 자기 힘을 최대한 끌어내 요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완성차 노동자들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



2018년 5월 28일 현대차 노조 "18년 입투 완전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보고대회"

## 양보론의 다른 이름이 연대임금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로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완성차 정규직의 임금 요구를 낮추는 대신 현대차 사측에 부품사·비정규직의 임금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하후상박은 임금·조건에 상향평준화를 위한 연대를 뜻하는 훌륭한 전통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해 사용자들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금속노조 지도부가 추진하는 '연대임금'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용자들에게 우리 몫을 늘리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공장 정규직의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지부 하부영 지부장은 대공장의 임금 투쟁이 부품사·하청 노동자들과의 임금 격차만 늘려 왔다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대공장 정규직이 잘 싸워 임금 인상을 쟁취하고 조건을 방어하면, 부품사·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대공장에서 임금이 억제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차의 임금 수준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기준 설정

자 구실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연대임금론(양보론)은 부품사·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만 끼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현대차지부 지도부가 투쟁을 발전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타협을 한 결과, 부품사·하청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도 더 어려워졌다.

진정한 하후상박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공장 정규직의 임금 자제가 아니라, 단호한 투쟁을 통해 사용자들을 강제해야 한다.

##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김종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1000여 명이 휴직·교육 중이다. 나는 그중 한 명이다. 2017년 10월부터 5주간 '직무 교육' → 5주 휴직 → 10주 교육 → 10주 휴직을 반복하고 있다. 8개월 가까이 일을 못하고 있다.

"체적 변형률 =  $a^3(1+\epsilon_1+\epsilon_2+\epsilon_3)-a^3/a^3$ "

이게 뭘까? 직무 교육 내용의 일부다. 현장에서 전혀 쓰지 않는 복잡한 수학 계산식을 배우고 시험을 친다. 노동자들을 얹혀 두고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성공자들을 만들어 해고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

교육 대상자는 주로 활동가들이다. 사측은 우리의 발목을 묶어 두려고 일부러 공장서 먼 곳에 교육장을 잡았다.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 곳까지 보냈다.

교육장은 페인트 냄새가 심했다. 많은 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

다. 우리는 전부 밖으로 나와 반발했다. 그러자 사측 관계자들은 수업 거부하면서 임금을 깎아 버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의를 계속했다. 결국 사측은 환경 측정이라도 해야 했는데, 이산화탄소 지수가 평균치보다 2배 넘게 나왔다!

결국 마스크를 호소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졌다. 그 뒤에도 또 한 명이 쓰러졌다. 엠블런스를 불렀지만 근처에 병원이 떨어져서 한 시간이나 걸렸다.

나는 어렵사리 교육을 끝냈지만 사측은 조선업 경기가 불황이라며 휴직하라고 했다. 노조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불황이 왔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위기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경영진에게 있다.

나는 아직 언제 복직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있다. 아침마다 창 밖으로 출근하는 노동 형제들을 보고 자괴감도 느낀다.

하지만 나에게 항상 함께해 준 동지들이 있다. 끝까지 투쟁해 꼭 승리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지키자

김지태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해양 석유·천연가스를 시추·생산하는 장비) 일감이 바다나면서 노동자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다. 사측은 곧 있을 생산 중단 사태에 대응해 남아 있는 정규직 2300여 명을 무급 휴직하고, 비정규직 2600여 명을 해고하려 한다.

해양플랜트가 호황이던 2013년에는 이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3만 명이 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유가가 지속돼 일감이 줄자 사측은 비정규직 2만 수천 명을 이미 해고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잘려 나간 자리에 남아 있던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일해 왔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장기간 휴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저는 지난해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못했어요. 회사는 복귀하기 전날에 휴직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요.”

사측은 이에 더해 최근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직까지 강요하고 나섰다. 다른 한 노동자는 말했다. “관리자가 와서 장기 해외 파견을 나갈래, 2~3년간 무급휴직 할래 하고 물었어. 몇 년간 무급휴직은 해고와 다름없으니, 어쩔 수 없이 파견을 가겠다고 했죠.”

사측의 공격은 일감이 없는 곳만을 향하는 것도 아니다. 일이 있는데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외주화·분사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엔진·플랜트·중앙기술원 등에서 일하는 401명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기업 분할된 현대일렉트릭에서도 외주·분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이 관철되면, 또 다른 정규직 노동자 497명이 비정규직 신세로 내몰리게 된다.

이미 지난 4월 현대중공업 사측은 대규모 ‘희망퇴직’을 압박하며, 수천 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자들의

반발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자, 부문별로 노동자들을 각개격파 하는 전술을 꺼내 든 것이다.

이렇게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 공격에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독에 구멍이 한 두 개씩 뚫리는 것을 방지하면, 더 큰 구멍이 생기고 독이 무너질 수 있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일감이 바다 났다고 고용을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부문은 지난해부터 수주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임금·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조선 부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해양플랜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워 사측을 압박한다면 말이다.

이럴 때, 임금·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결합돼야 한다. 그래야 지난 몇 년간 임금이 크게 줄고 고통을 받아 온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유급 휴직이나 숙련 향상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그것은 사측이 강요하는 무급 휴직이나 활동가 탄압용 ‘직무 교육’과는 다르다. 그럼에도 유급휴직 등의 요구는 1년여간 연속된 휴직으로 임금이 깎이고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을 주지 못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13일 7시간 파업을 한다. 최근 일부 대의원과 활동가들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맞선 단결 투쟁을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이 지방선거의 이슈가 됐던 상황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정세가 아님을 보여 준다. 현대중공업의 투사들이 싸울 기회가 있음을 이해하고, 기층에서 단결 투쟁을 건설해 나간다면 지지를 넓히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고용안정 쟁취, 원·하청 공동투쟁 5월 29일 현대중공업 2018년 입만투 출정식

사진 출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통합하는 1사1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4일 원하청 공동 집회를 열었고, 9일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을 위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전부터 일부 우파적 의견 그룹들은 “1사1노조의 피해자는 조합원”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는 반동적인 선동을 벌였다. 그러나 통과하게도 민주파 대의원과 활동가들이 단호하게 논쟁을 벌여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번 노조 통합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상황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

이다. 그간 사측은 사내하청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탄압했고 재취업도 어렵게 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체불, 업체 폐업 등으로 고통을 당했다.

노조 통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투쟁에 나설 용기를 줄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투쟁의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민주파 집행부 등장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받았었다. 민주파 집행부 초기 일부는 조합원이 아닌데도 정규직의 투쟁 집회에 참여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그동안 구조조정 공세 속에서 ‘비정규직의 우산’이 되지 못했다. 조선업 전반에서 노조 지도자들은 ‘내 코가 석 자’라며 비정규직의 해고에 눈감았고, 현대중공업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일부 활동가들은 ‘원하청 연대는 정규직의 임금 양보’라는 식의 잘못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진정한 연대 투쟁을 구축할 수 있다. 소수지만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 해고나 임금 체불에 맞선 경험도 있다. 활동가들은 노조 통합과 조직화 캠페인의 분위기를 활용해 기층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이정원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는 부당한 행위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조 규약에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

고 있다. 대다수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 종료 때마다 구직을 위해 실업을 겪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한 조건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며 학교 교육을 떠맡치고 있지만,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불안과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노조 설립 신고마저 반려한 것은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나서서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쪼개기 계약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제 교사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노조가 필요한 이데인데, 이들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인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김이원

고 하는 것은 아박하기 짝이 없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정부가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을 해결할 정규직 전환은 외면하더니 이제는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들의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

했다.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로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은 익히 알렸지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해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옥죄고 있음이 드러났다.

7월 11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에게 설립 신고 반려 취소를 요구하고, 기간제 교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한 연대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하반기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의 일부로서 함께 싸워 나가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예멘 난민 반대 청원 70만 명

# 난민은 위험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김종환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한 달 동안 약 70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이래 최대 청원이다.

여기에는 난민을 받으면 일자리가 줄고 복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는 구직이 아예 금지되거나 사실상 3D 업종으로 제한된다. 한 번에 허가 되는 체류 기간도 짧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를 어기고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꾸리려 하면 난민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주민을 재판도 없이 무제한 구금하기로 악명 높은 외국인보호소에 1년 이상 갇혀 지내면서 난민 소송 절차를 밟는 난민들도 상당히 많다.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몇 년이고 제약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은 참말이 아닌 것이다.

난민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국민으로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이 사장들의 저임금 강요에 맞서려면 이런 난민들이 자신들과 같은 조건을 누리도록 연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관련 기사 8면)

‘국민의 삶이 이토록 팍팍한데 정부는 난민 지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생각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난민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조차도 숙박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 안정된 주거지는커녕 학교나 병원 같은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많다. 한 활동가는 국내 난민의 처지를 이렇게 요약했다. “굶어 죽을 것인지, 법을 위반하고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지가 두 가지 밖에 없다.”

난민 탓에 범죄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여성들이 민감한 듯하다.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 비율은 내국인보다 현저하게 낮고, 특히 체류 자격이 취약할수록 더 낮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는 길어야 1년, 대체로 2~3달마다 당국에 신고해야 할 정도로 체류 자격이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 “2017년 체류 외국인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외국인 범죄는 오히려 감소했다.”(7월 5일 자 법무부 보도자료)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이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기우인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외국인 범죄 급증’, ‘전국에서 제주도가 범죄율 가장 높다’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와 통계를 공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몇 년간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5배 가까이 늘면서(2010년 77만여 명→2016년 360만여 명) 각종 사건사고가 잦아진 탓이 크다. 더욱이, ‘외국인 범죄’로 분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신호 위반 등 ‘교통 범죄’였다. 맥락에서 떼어 낸 수치만 부각해 현실을 왜곡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제주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주장도 통계에 의한 착시 효과다. 보통, 범죄율은 인구 수 대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로 계산하는데 제주도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서 이 값이 크게 왜곡된다(거주민 67만 명 vs. 내외국인 관광객 1500만 명). 관광객은 범죄 건수를 집계할 때는 포함되지만 인구 수를 집계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유동인구를 고려해) 인구를 늘려 계산하면 [제주도의] 범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우리는 예멘 난민을 환영한다” 6월 30일 난민 환영 집회

## 난민 비방 운동가들의 거짓말들

이처럼 난민 유입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난민에 대한 비방일 뿐이다. 이런 비방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동안 서구 지배자들이 퍼뜨려 놓은 무슬림 혐오가 크게 작용한다.

미국과 서유럽의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이슬람이 여성을 천대하고 폭행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부추겨 왔다. 특히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서구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시리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전쟁을 일으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현지 독재자를 후원한 것에 대한 분노가 테러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그 대신 이슬람의 폭력성 탓이라고 속여 왔다.

난민 비방 세력은 이런 무슬림 혐오를 ‘국민이 우선이다’라는 포퓰리즘 기치로 포장해서 퍼뜨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우익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다.

실제로 6월 30일 난민 반대 집회는 영락없는

이슬람 혐오 집회였다. 주최 측이 “엄선”했다는 연사는 버젓이 연단에서 ‘이슬람이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한 이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특정 종교 혐오가 아니”라는 주최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

다른 연사는 프랑스에서 벌어진 공격의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며 난민 반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프랑스가 지금도 중동을 폭격하고 있다는 것과 식민지였던 알제리 출신 프랑스 국민들을 지독하게 차별해 왔다는 것이 그런 공격의 진정한 원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떼어 내어 난민을 받아들이면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 지나치게 관대한 난민법?

난민법의 “허점” 때문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다며 난민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난민 비

방 우익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일본은 난민법 아예 없었지만 2016년, 2017년 모두 한국보다 난민 신청자가 각각 1.4배, 1.9배 많았다. 진실은, 2013년 이후 아랍 혁명이 패배해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반혁명이 승기를 잡아 생지옥으로 변하자, 세계적으로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고 그 가운데 극히 일부가 머나먼 한국까지 왔다는 것이다.

난민 비방 우익은 그동안 자신들이 우익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쟁점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자 말을 뒤집고 우익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2차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은 자유당 국회의원 조정태가 와서 발언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자유당의 다른 국회의원 김진태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많다. 김진태는 박근혜 반대 촛불 시위를 탱크를 동원해 짓밟으려 했던 기무사를 옹호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며 난민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런 자를 추켜세우다니 정말 가증스럽다.

## 우익과 타협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되고,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 진앙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는 한 달 가까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려 왔다.

청와대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우익이 영터리 내 용으로 난민을 비방하고 청와대 청원 동참을 호소·조직할 시간을 허용했다. 이제 자유당 조정태와 김진태, 바른미래당 이연주 등 우익 국회의원들은 난민 비방 우익과 손을 잡거나 그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다.

난민 문제 주무부서인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6월 29일 발표한 난민 대책은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현행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줬다. 반면 난민 비방 반박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 특히 법무부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난민 심사, 최소한의 인력도 갖추지 않은 난민 제

도 운용, 법으로도 보장된 난민 신청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기존 난민법도 난민들 처우에 극도로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인정률은 오히려 더 낮아져 2017년에는 1.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쟁 등으로 난민 신청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형편없이 낮은 인정률 때문에 자연히 난민 불안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많아졌다.

법무부의 ‘대책’ 중에는 난민심판원 설치가 있는데, 난민 보호보다는 사실상 이의 신청을 빠르게 기각하거나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 심사] 이의신청 과정은 ‘밀저야 본전’이라는 셈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며 전부터 난민심판원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를 꺼내든 것이다. 기존의 난민법 개정안들이 대체로 난민 심사에서 절차적 권리 향상,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반면, 이번에 법무부는 우익 포퓰리즘 뒤에 숨어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하는 것이다.

최근에 정부는 10월부터 이집트인들의 무비자 입국도 막겠다고 발표했다. 이집트는 반혁명으로 500명이 한꺼번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정치 탄압이 혹심하고 난민 신청자도 많다. 그런데 이들의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국제적 책임을 운운하지만 실상 난민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범죄시하는 분위기를 이용해 박근혜의 대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휘둘러 첫 구속자를 만들었다. 형법 상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이시스(ISIS)와의 관계도 모호한 세력의 영상을 공유하고 가입을 권했다는 것만으로 한 난민 신청자를 구속한 것이다.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해 열악한 처우 속에 내몰린 난민들을 더한층 억압하려는 정부의 난민법 개악과 무비자 입국 강화 등으로 더한층 고통을 당하게 생겼다.



# 독자편지

ws@wspaper.org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 기아차 계약직 노동자의 편지

# 일용직·계약직으로 부리다 해고한 사측

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5월 까지 기아차 사내 업체인 '대성엑스택'에서 오직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5분 대기조로 있으면서 일했는데, 일을 주간에 하게 될지, 야간에 하게 될지, 아니면 그날은 일을 못하게 될지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간 조는 오후 1시에, 주간 조는 새벽 4시에 전화가 옵니다. "출근 할 수 있나?"고 물으면 저는 항상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출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부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보통 다음날 출근은 미지수였고 거의 대부분 당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간, 야간 연속근무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기회를 더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자.' 야간 조 일을 끝내고 휴게실 딱딱한 바닥에서 쪽잠을 잔 뒤에, 다시 다음 날 새벽부터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관행인 양 저를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은 교대 시간에 저를 보면 "출근이에요? 퇴근이에요?" 물었습니다.



이재혁

6개월 정도 죽어라 일을 하니 계약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은 두 달이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일용직과 계약직을 교대로 오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따지고 들면 해고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계약직이 돼서도 소위 말하는 '두 탕 튀기'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부재 인원이 있으면 다른 공정에도 땀땀으로 투입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 산산조각 난 꿈

2017년 10월경 계약직 갱신이 되지 않았고 출근하라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장과 주임에게 전화해 "해고하시는 거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다시 일용직으로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군소리 없이 출근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두 차례 면담에서 자신이 다른 업체로 가면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지원로지스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뒤 "내가 언제 당신을 데리고 간다고 했냐"며 고성과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2018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채용돼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자 '직원들 간의 불화와 근무 태도 불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업체에 근무하게 된 지 1년 11개월 되는 때였고, 1개월만 더 지나면 업체가 정식으로 채용해야 하니 해고를 한 것입니다.

제 꿈은 해고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지회를 찾아 노조에 가입하고 처음 해 보는 복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 온 모든 동료들의

꿈은 정규직 전환입니다. 이 꿈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며 업체 사장과 원청 관리자들에게 잘 보인다고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결국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을 얻지 않았습니까? 계약직, 일용직으로 일하며 서러움을 참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 노조에 가입해서 함께 싸웁시다. 더는 사측에 이용당하지 말고 힘을 모아 우리의 꿈을 우리가 성취해 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공장에서 홍보물을 나눠 줄 때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 주는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연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마치 동정하는 듯 보거나 무시하십니다. 저희를 같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료로, 동지로 여겨 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측은함이 아니라 동지로서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재혁 기아차 계약직 해고 노동자

## 난민 인정 소송 이집트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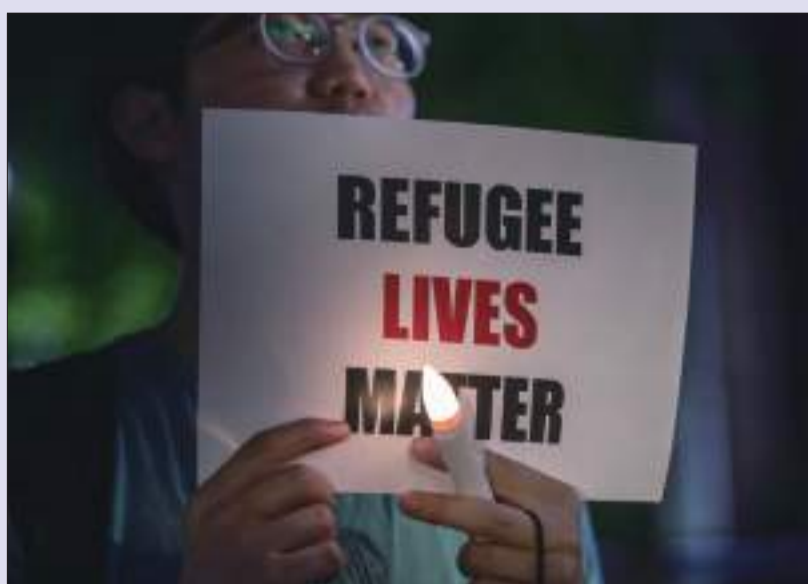
# “증거를 제출해도, 면접을 해도 답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이집트 난민 신청자인 자이드 씨가 자신의 사정이 한국 난민 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해, 자신의 얘기를 들려 주고 싶으며 본지에 연락해 왔다.

나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팔레스타인 난민이고 어머니는 이집트인이다. 국적은 아버지 쪽을 따르기 때문에 이집트 국적을 받지 못했다. 22살 대학생일 때이던 2005년부터 반정부 활동 시작했고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에도 참가했다.

나는 2012년 항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그때 팔레스타인 국적이 문제가 됐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드디어 테러 단체 하마스가 이집트에 침투했다며 떠들어댔다.

내 소식이 <알자지라>에 보도되고, 동료들이 내 신분을 증명할 증거를 많이 제출해 주고, 항의가 커지자, 8일 만에 가석방이 될 수 있었다. 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어서,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난민의 삶도 소중하다” 6월 30일 난민 환영 집회

2년이 지난 2014년 11월 18일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년이나 감옥에 있을 수는 없었다.

한편, 내가 가석방 상태로 있던 2014년 2월에 이집트 법이 바뀌어 내무부가 나에게 이집트 국적을 부여했다. 나는 형 선고가 나온 뒤인 2014년 11월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그곳에서 지내는 도중, 캐나다에 정착한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다. 아버지는 캐나다로 오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캐나다 대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갈 수 없었다.

말레이시아에도 돈이 떨어져서 더 지내기가 어려워졌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난민을 지원한다고 했고,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

다. 한국에는 2016년 4월 4일에 도착했다. 4월 8일에 난민 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소에 찾아갔다. 직원은 듣기 귀찮아하며 저쪽에 가서 앉아 기다리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들 쪽을 보지 말고 시선을 문에 고정시키라고도 했다.

난민 신청 후 무려 10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중순에야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심사관은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었다. 사적인 질문도 던졌다.

결국 세 달 뒤에 난민 인정 거부 통보를 받았다. 우선 내가 제출한 서류 일부에서 날짜 오류가 발견됐다. 이집트에 있는 변호사에 연락해 서류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한국 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거부 사유는, 내가 가석방 상태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받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있으면 감옥에 갈 상황이었다. 그밖의 사유도 말이 안 됐다.

이런 결정을 받아 보니, 인터뷰가 무의미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삶을 망치고 낭비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은 1분 1초도 아까워한다는데 우리 인생은 몇 년씩 낭비돼도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수구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수의사로 일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대체 언제까지 하수구만 치워야 하는가?

한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뿐 아니라 자국의 난민법도 안 지킨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미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다.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인터뷰·정리 박이랑

축약되지 않은 인터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성명 — 혜화역 몰카 항의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

# 여성의 정당한 분노를 지엽적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2018년 7월 1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혜화역 3차 시위가 7월 7일 열렸다. 성차별 반대 시위 사상 역대 최대 규모였다(주최 측 발표 6만 명). 주최 측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5월 19일 1차 집회와 6월 9일 2차 집회는 각각 2만여 명, 4만 5000명으로, 시위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

참가자들은 주로 10~2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시위 스태프의 다수도 20대로 보였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여성 시위를 이 젊은 여성들이 몇 달 새 세 차례나 벌인 것이다.

이번 시위는 그동안 불법촬영(몰카) 수사·처벌 과정에서 일어난 여성 차별에 대해 여성들이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사회에서 이등국민 취급받아 온 것 전반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대통령 하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 점은 2차 집회 뒤 나온 성명서와 3차 집회에서 두드러졌다.

## 실망

집회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차 집회 뒤 이렇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10대 공약으로 몰카 판매 및 소지 허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말뿐인 정부, 일회성인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 대책을 발표한 뒤 몰카 피해 방지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 방심위가 몰카 영상을 삭제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삭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2차 시위 뒤 드러났다.

국방장관 송영무나 여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던 청와대 비서관 탁현민 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높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용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2차 집회 뒤인 6월 15일 불법촬영 카메라(몰카) 탐지기 재원 50억 확보, 불법촬영물 공급자 수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건수도 최근 급속히 늘고 있다. 대규모 시위 덕분이다.

그러나 '불편한 용기' 측은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요구하며 적어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주류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반쪽 관심을 경계하며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현명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와 항의의 표현이 3차 집회에서 나왔던 것이다. 몰카 관련 편파 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인의 3일 국무회의 발언을 성토했으며 대통령 풍자 퍼포먼스도 벌였다. 완전히 옳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두고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차별 반대 여성 시위가 몇 달 새 세 차례나 열렸다 7월 7일 혜화역 시위

일부 언론과 친문 인사들, 김여준 씨는 혜화역 시위를 '과격하고 극단적인 혐오 시위'라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한 참가자가 문재인을 향해 "재기해"라고 발언하고 참가자들이 따라 외친 것과 한 여성이 '곰'이라고 적은 종이를 얼굴을 가리고 퍼포먼스를 한 것이 성토했다. "재기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신' 자살하다/라라는 은어로 사용돼 왔다. '곰'은 문재인인의 성인 '문'을 뒤집은 것인데, 친문 진영은 이를 문재인도 투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노무현의 죽음까지 조롱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관용적이라는 건 완전한 오해임을 그들이 입증하고 있다.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단어 사용 여부만을 놓고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인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과정에서 극소수 참가자들이 박근혜에게 성차별적 편견이 섞인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 시위를 '여성 혐오'로 비난한 것이 부당한 것과 비슷하다.

## 피상적

주최 측도 아닌 참가자, 정치인이나 훈련받은 활동가도 아닌 서민층이 다수인 20대 여성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불만을 즉자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표현 형식만 갖고 이 집회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을 '곰'으로 표현한 것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 2017년 2월 27일 문재인 캠프도 곰을 문재인인의 상징 이미지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흥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야 해당

여성이 잘못을 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수사에 대해 수사당국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신속한 수사·처벌, 신속한 삭제 등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했다는 여성들의 성토했는 전적으로 옳다.

위마드가 시위를 주도하므로 혐오 시위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옳지 않다. 위마드가 시위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해도 이 시위는 3회 만에 연인원이 10만여 명에 이르는 대중 시위다. 참가자들(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보지 않고 운동 집행부만을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관심을 딴 데로 돌려 사람을 헛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불법촬영, 비동의 영상물 유통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는 노동계급 여성들 사이에서도 광범하다. 실제로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니는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다. 그것이 위마드 사이트 이용자인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자원자들로 구성된 스태프만 200명이라고 하고, 여러 글을 볼 때 주최 측도 단일한 성향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집회 조직 방식을 놓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집회 직후, 시위를 지지하고 시위의 요구를 정부가 이행토록 더 노력하겠다고 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집회 현장에 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쟁점이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두 장관 말이 실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하자.

"공중화장실 관리는 행안부의 고유 업무 ... '편파수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 ... 저의 책임이 큼니다. ... 몰카 단속과 몰카법 철폐, 유통망 추적색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여성의 외침이 ... 왜 저토록 절박한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김부겸)

"국가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성토했다 ... 생생한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고,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의

두려움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정현백)

녹색당 신지혜 서울시장 위원장도 일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여성차별적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지적했다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부당한 비난이다.

## 운동의 특징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 가능하다는 방침만 제외하면 이 운동이 채택한 정당·운동권 참가 거부, 개인 자격 참가 방침은 2008년 촛불 운동의 초기 국면을 연상케 한다. 당시 촛불 집회에도 10~20대 청년들이 많았는데, 대개 연성 아나키즘 성향을 보였고 기존 진보단체를 포함해 공식 정치세력들에 대해 불신과 경계를 드러낸 바 있다.

몰카 범죄 피해자의 압도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압도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이 즉각적 분노를 드러내며 분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전술은 운동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들조차 분열시키는 약점이 되기 쉽다. 일상 생활에서 남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은 별로 없다.

최근 주최 측 내에서 일어난 분

열의 핵심 쟁점 하나가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던 것도 이 점을 반영한다. 기존 대외팀은 '생물학적' 여성에서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이 시위를 배타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고 했다. 최근 난민 배척 선동이 일어나면서 혜화역 시위가 그런 배타적 움직임과 연결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듯하다.

혜화역 시위는 몰카 시위 쟁점으로 터져 나오긴 했지만 근처에는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반발이 있다. 따라서 이 운동이 여성 차별에 도전하는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려면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성범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도 많다.

더 개방적인 조직 방식이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 더 성공적인 운동이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노동자연대 성명 — 워마드 한 회원의 성체 모욕 사건

# 마녀사냥 하기 전에 먼저 여성 차별에 대한 반감의 심정을 이해해야

이 글은 2018년 7월 11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 교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커다란 반감 때문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게 된 듯하다.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 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딴노?”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경해 온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하다. 비록 위 게시물 작성자는 성체를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에 불과하다고 여겼을지라도 말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워마드 한 회원의 방법이 과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감만큼은 정당함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가톨릭 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



여성의 낙태권 전면 부정에 앞장선 가톨릭 교회는 워마드 '성체 훼손' 게시물 작성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전면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그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적지 않다)에게 큰 분노를 안겼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위 게시물 작성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법적 처벌” 운운도 적반하장이다.

### 낙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낙태가 살인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었다. 아

직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없던 1세기 원시 그리스도교는 낙태에 관한 공식 교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다양한 개인 의견이 존재했을 뿐이다.

2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낙태가 살인이라는 개인 의견이 교부들 사이에서 유력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낙태가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1세기에 이어 다시금 다양한 개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낙태를 강력히

변호했다(그리스 형이상학을 원용해서 그랬지만). 예로니무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초기 낙태를 옹호했다.

공식 교리(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리)로서의 낙태 살인론은 1869년 교황 비오 9세가 확정했다. 그리고 1884년 교황 레오 13세가 낙태 살인론 교리를 재확인했다.

19세기 중엽은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적 가족을 지키고자 여성의 재생

산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기 시작하고, 또 같은 이유로 성소수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가톨릭 교회는 1917년에 교회법을 개정해 어떤 낙태든 파문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의 가톨릭 교인들은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과 태도가 다르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가톨릭 교인 가운데 65퍼센트가 “프로 초이스”(낙태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단지 22퍼센트만이 낙태 금지 법률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성 교인의 58퍼센트가 자기 교구 주교의 낙태 반대 교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출처: Ashley Gipson, “Survey: Catholic voters split on abortion, gay marriage.” 또, “Many US Catholics Out of Step with Church on Contraception, Abortion,” Voice of America 2008년 4월 14일. 또한 Jon O'Brien and Sara Morello, “Catholics for Choice and Abortion: Pro-choice Catholicism 101.”)

위에서 보았듯, 가톨릭 교회 역사로 보면, 보통 교인들의 실제 삶을 보면 가톨릭 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워마드 한 회원의 행동은 여성 차별에 대한 극도의 반대 심정의 표출로서 보아넘겨야만 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의 진보 인사들은 가톨릭 교회의 여성 차별에 심각한 의제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 영화평 | <히스토리>(민규동 감독)

#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위안부’ 피해자들의 ‘관부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 <히스토리>가 상영 중이다.

관부 재판은 1992~1998년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하관)를 오가며 벌인 법정 투쟁이다. 6년간 23번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일본을 드나들며 싸웠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일본 국가가 피해자 한 명당 보상금 30만 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부 재판은 일본의 공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나 이후 2심과 최종심에서 이 결과는 뒤집혔다.)

이 영화는 과거 회상 장면 대신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로 얘기를 전개한다. 그래서 과거의 고통보다는 그 고통을 딛고서 싸우기 시작한 현재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이 있다.

배경이 199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의 공식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위해 싸우는 할머니들의 모



습은 바로 지금의 일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더는 남은 책임이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일본 피고 측의 모습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위안길로 묻어 버리려는 지금 일본 정부의 모습과 똑같다. 현실성을 더하듯 영화에는 수요시위 장면도 나온다. 여행사 사장이었지만

점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주인공 문정숙도 현재 부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실존 인물 김문숙 씨가 모델이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을 도우려고만 들었던 일본인 후원회가 일본 극우들과 충돌하는 장면에서는 단순한 ‘반일’ 정서를 넘어서려 한 감독의 뜻이 느껴졌다.

감독은 의도적으로 슬픔을 일으키

는 장면은 최소화하려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사들은 그 어떤 창작물보다도 보는 사람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든다. 영화가 끝난 뒤로도 배역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몇 개월간 우울증을 앓아야 했다는 주연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도 큰 몫을 더한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이런 가사의 노래가 반복된다. “사라지지만, 흐르지지만, 영원히.” 7월 1일 돌아가신 김복덕 할머니가 떠올랐다. 먹 먹함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감독은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임무를 잘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인공 문정숙의 이름을 문재인과 김정숙에서 따 왔다고 말했다. 문정숙은 “부채 의식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네 모습을 상징”한다고 고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느껴야 할 부채 의식을 잊어버린 것 같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이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폐기되는 커녕 재협상도 없이 그대로다. 피해자들은 이 합의에 관해 한국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위안부 문제는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 사이 올해만 다섯 분이 한을 간직한 채 돌아가셨다. 이제 스톤 일곱 분만 남았다. 이렇게 하나둘 피해자들이 사라지기만 기다리는 건 일본 정부만이 아닌 걸까?

영화 속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이 단지 과거가 아닌 이유다.

김승주

### 더 읽어 볼 온라인 기사

- ★ 신간들을 낸 박유하 교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장우성

7월 12일 전국의 건설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인다.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 목수,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외선전기 노동자 등 직종도 고용주도 다른 노동자들이 한데 모인다.

건설 현장 조건을 개선하려면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매년 투쟁 때마다 정부가 약속해 무마해 놓고는 지키지 않은 것들을 지키라고 촉구한다. 이번 상경 투쟁에서 건설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근로자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 안전한 건설현장 정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토목건축·타워크레인 임단협 승리도 주요 목표다.

건설 노동자는 73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몇 주 혹은 몇 개월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각종 사회보장에서 소외돼 언제나 '내일의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월 평균 267만 원인 임금은 전 산업 평균의 78퍼센트 수준이지만, 이조차도 체불되기 일쑤다. 건설 현장에서 매해 500~600명이 목숨을 잃는다.

지난해 11월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잠시 마포대교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2월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퇴직공제제도 개선, 임금지급 보증제,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도 대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은 하루



정부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

4200원 하던 퇴직공제부금을 800원 올린 것뿐이다.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차일피일 미뤘다. 부족한 대책마저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레 놓고는 건설노조 파업이 다가온 7월이 돼야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이번 상경투쟁은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 집회였던 6월 30일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뒤로 불과 2주 만에 벌어지는 노동자 수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이는 대(對) 정부 시위다. 건설 노동자 상경 투쟁 바로 다음 날에는 금속 노동자들도 하루 상경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무척 곤혹스러운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앞두고, 건설기계 산재보험 특별 적용 추진, 직접 시공 확대, 다단계

하도급 근절이 포함된 건설산업 혁신 방안 등을 내놓았다. 서울경인철권연합회가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와 임금 인상을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특별대상 대상에 포함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것도 이런 대책 중 하나다. 그러나 보험료의 절반과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노동자가 부담해야 해,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처럼 당장의 곤경을 모면하려고 한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상경투쟁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약속 이행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 후퇴

올해는 건설경기가 후퇴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내건설수주는 2015년 이후 3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14.7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줄어드는 이윤을 만회하려는 기업주들의 공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52시간 시행에도 기업주들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며 노동강도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토목건축 등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대기자가 늘고 있다. 사용자들은 고용 불안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하며 조건 하락을 압박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내국인과 외국인'과 같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이간질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내걸고 투쟁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투쟁을 강화해야만, 다단계 하도급, 포괄임금제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뿌리뽑고 노동조건을 방어할 수 있다.

##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퍼센트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사용자들이 장기 경제 침체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소와 한국GM의 인력 감축은 생생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마련과 개선을 외칠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골적으로 기업주들을 편들고 있다.

그러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것이 마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조처인 듯이 주장한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도 '외국인 때문에 줄어드는 일자리'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척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

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척했던 것처럼, 그들이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양 위선을 펼 때는 진정한 속내가 따로 있다.

우파와 정부의 노림수는 경기 침체 하에서 커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기업주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건설업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대부분은 현재 이행률이 제로 수준이다. 기업주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오로지 민주노총이 폐기를 요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만 이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조처들은 미뤄 둔 채, 이주노동자 희생양 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 불안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

업들의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다단계 하도급은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해 온 주범이다. 최근 건설 사용자들은 유연근로제 확대까지 동원해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려 한다.

### 희생양

일부 건설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이 다단계 하도급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보다 '내국인 고용 우선'(이주노동자 고용 규제)을 요구하는 게 고용 안정을 위한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노동자 한 집단을 희생시켜 다른 노동자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논리다. 우파와 기업주와 정부는 이런 생각을 노동자들 사이에 퍼뜨리곤 한다. 그것이 노동자에겐 독,

기업주에겐 약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후퇴할 때는 더욱 위험하다. 정부와 기업주는 취약 집단 희생양 삼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피한 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이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노동자들이 분열하면 파업을 해도 그 효과가 감소하기 쉽다. 반목에 온 노동자 집단이 대체인력으로 나서기라도 한다면 재앙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 규제가 아니라 기업주의 양보를 강제할 때만 실질적인 일자리 개선이 가능하다.

건설 노동자들은 기업주에 맞선 끈질긴 투쟁으로 일자리 개선을 이룬 경험이 적잖다. 2012년 타워크레인 백

체 지지 방식 도입도 그런 사례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일부 향상되고 타워크레인 설치 대수가 늘어 일자리도 30~40퍼센트가량 늘어났다.

기업주들이 양보하도록 만들려면 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대우에 고통받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손을 내민다면 얼마든지 함께 싸울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건설노조에 대거 가입했던 이전 경험을 그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기업주와 부당한 제도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설득해야 한다.